민선 4기 출범 한달

8월 1일은 민선자치 4기가 출범한지 꼭 1개월이 되는 날이다. 재선단체장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힘차게 민선 4기를 출발했으나 시작은 좋지 않았다. 박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 시의회 구성을 둘러싼 내홍에 시달렸고, 박 지사 또한 도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조직개편안이 유보되는 상처를 입었다. 시장·지사 모두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부쩍 는 정치적 잡음 경제드라이브 장애물 우려

박광태 광주시장

'잘사는 1등 광주 건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1개월동안 줄곧 공들여온 화두(話頭)다. 강력한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대 역점 시책을 조준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살리기 행보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화 등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빛이 바랬다.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할 '문화수도 조성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박 시장의 정치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조직안정부터 꾀했다. 시청내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민선 3기부터 중점 추진해온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도록 공직자들을 독려했다.

취임 보름만에 미주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경제 시장'다운 행보도 계속했다. 과학기술교류센터·디지털융합부품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착수하게 하고, 광주에 국내 최초의 댁내광가입자망(FTTH) 서비스 시대도 열었다. 박 시장은 특히 뉴욕 투자유치 설명회에 가던 중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하자, 미국 5개 주 1천500km를 자동차로 횡단한 끝에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열정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비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빚어진 '고소·고발전', 시의회 의장 선거 개입설로 촉발된 민주당 중앙당과의 갈등은 박 시장 개인의 정치적 부담을 넘어 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대형 프로젝트 첩첩인데 도의회와 갈등 발목 잡혀

박준영 전남지사

민선 4기 출범 후 한 달동안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뛰었지만 조직개편안 갈등이라는 뜻밖의 장벽에 막혀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

박 지사는 민선 4기에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정 주안점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도내 전 지역 1시간대 고속교통망 구축,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 육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반 조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4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역을 환골탈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목표를 세운 박 지사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예산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조직개편안'이 불러온 의회와의 갈등에 발목을 잡혀 있다.

전남도는 박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농촌 마을 통·폐합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마을과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해양수산환경국에서 환경을 떼어 내 경제통상국과 합쳐 경제과학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측이 서로 감정이 개입되면서 지난 21일 마무리된 제21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박 지사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현실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밀어부치려 하거나 도정 파트너인 의회에 대한 이해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전남도정은 당분간 '산통'(產痛)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제공항 없어 여행비용 더 든다

■외국인 관광객 광주·전남 왜 안찾나

숙박시설도 불편…무안공항 개항 등 시급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사업육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공항·특급호텔 등 지역 관광인프라 부족 탓이 가장 크다. 외국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와 대안을 알아본다.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이 우선=전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하룻밤을 숙박할 경우 1만원, 2박에 2만원, 2박 이상이면 2만 5천원의 보조금을 유치여행사에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광주·전남에 발을 딛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외국인들이 서울과 인천, 부산에 몰리는 탓은 세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도 있지만 인천공항·김해공항 등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손쉽게 다다를 수 있다.

일부 직항노선을 제외하고 인천·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전남을 찾으려면 국내선 항공이나 고속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된다.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광주·전남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이 절실하다. 무안국제공항은 공정률 85%상태에서 부대시설만 갖추면 언제라도 개항이 가능하지만 건교부는 항공수요예측을 구실삼아 오는 2009년께로 개장을 미루고 있다.

문인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은 동중국 지역과 후쿠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일본관광객의 중요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관광진흥을 위해 조기개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편안한 숙박시설 절실=특급호텔이 전무한 실정인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크다. 광주·목포·여수 등 중요도시에 산재해 있는 몇몇 호텔을 빼곤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암의 마르코폴로호텔이 리모델링중이고, 여수 화양지구의 대단위 관광레저타운 개발이 추진중이지만 단체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 화원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개발을 서둘러야만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관광상품 경쟁력도 높여야=지난 5월 목포에 들어온 초호화유람선 '더 월드'호 승객들은 순천 낙안읍성을 찾아 수문장 교대식 등을 관람하고 "원더풀"을 연발했다. 가장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이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힌트를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전남지역은 다도해와 갯벌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디어와 예산지원이 병행된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 27일 문을 연 신안군 증도의 갯벌휴양타운 개장 전에 이 곳을 둘러보았던 상하이지역 투자자들은 중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유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S프로젝트 특별법 내년까지 통과 시킬 것"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 "민간차원 추진 어려움 많아"

행담도 사건 등으로 한동안 표류해오던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이 민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NGO담당 대사이자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사진〉은 최근 "내년 4월께 대선 주자들에게 서남해안특별법 도입을 요구해, 내년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경남도 등에서는 남해안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20억원이나 들였다. 서남해안 특별법의 경우 민간기구인 서남해안 포럼이 앞장서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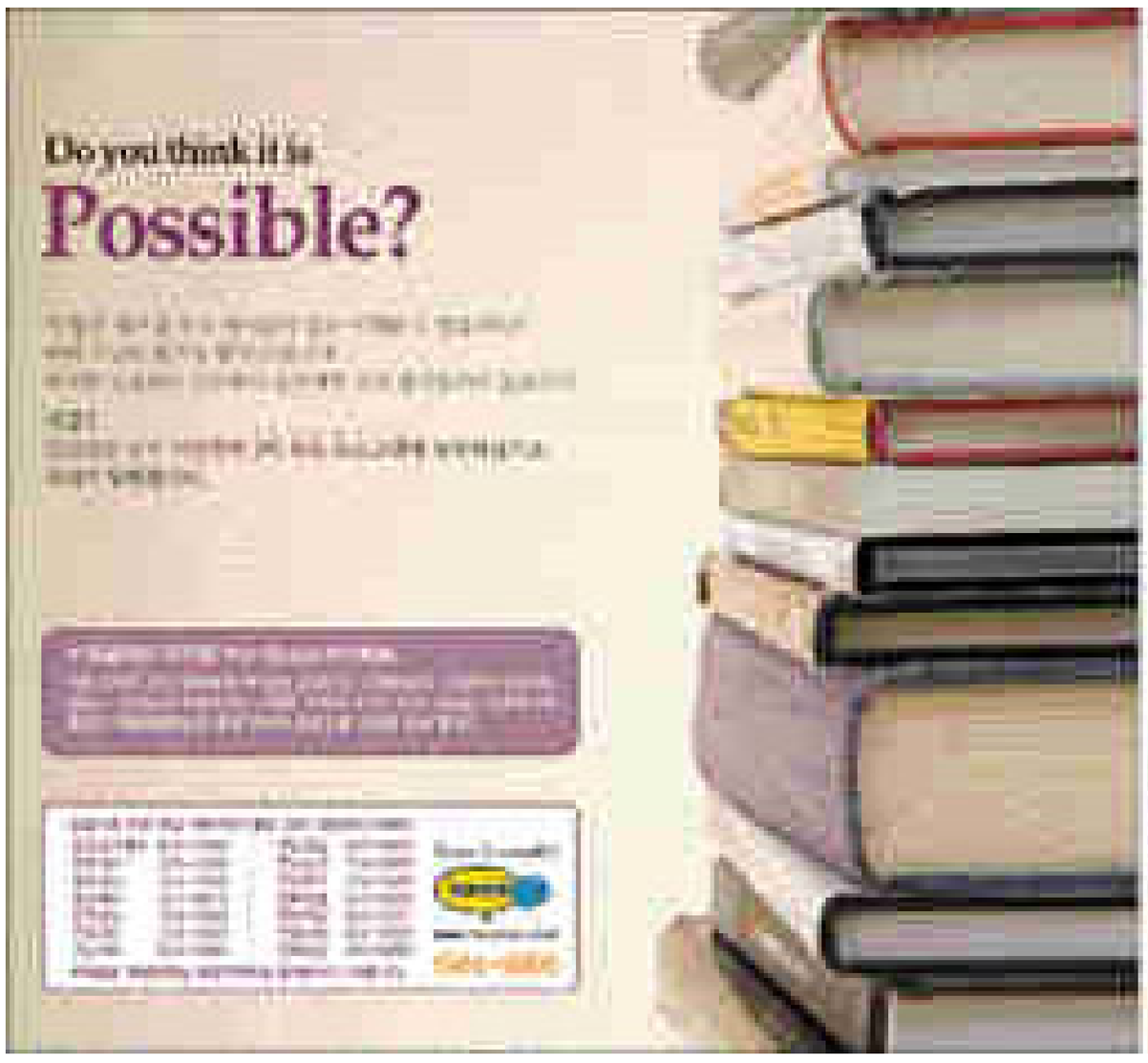
정 전 수석은 이런 상황을 "남해안특별법이 비단 옷으로 꾸며진 법이라면 서남해안특별법은 '몸빼 바지'수준"이라고 비유했다. 정 전 수석은 이어 "보다 많은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특별법의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수석의 이날 발언은 대선전이 본격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서남해안 개발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즉 대선 주자들에게 서남해안지역의 낙후성을 인식시켜 특별법 제정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S프로젝트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작년 5월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S프로젝트의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한 게 화근이 된 것.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으로 사직했으며 정 전 수석 역시 홍역을 겪는 등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서남해안특별법 추진은 비영리 서남해안 포럼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서남해안 포럼은 지난 1월에 창립돼 민간차원에서 정부의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서남해안 특별법 추진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서남해안포럼 조상철 팀장은 "정치권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권이 호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중차대한 사업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 팀장은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호남사람들이 법 추진을 위해 힘을 합쳐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S프로젝트=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사업)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싱가포르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서남해안 9천만 평을 15~20년간 약 50조원을 들여 항공물류 단지·과학연구단지·테마리조트등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된다면 인구 50여만명인 이 지역에 인구 150만명의 친환경산업과 레저산업이 어우러진 국제기업도시가 탄생하게 된다.